



2026. 1 20.(화) 10:00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 발언

-고성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및  
‘초저가 임대주택’ 도입 촉구-

---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새해 첫 의정 일정으로 열리는  
2026년 첫 회기를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고성군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방 소멸의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인구 문제,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신혼부부와 귀촌인의 정착률도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고성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주거’입니다.  
살 곳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머무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장기간 방치된 4층짜리,  
2천5백 제곱미터 규모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청년과 신혼부부, 귀촌인의 정착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정이 인구 증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 하동군은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 ‘정착 0원 임대주택’ , ‘월 1만 원 임대주택’ 등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주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11.9: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폭발적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하동에는 실제로 전입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수도권까지

‘만원 주택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도 청년들이 집이 없어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월세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개소했습니다.

5층 규모, 36세대.  
보증금 부담 없이 월 1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1만 원 임대주택, 일 1천 원 임대주택과 같은  
초저가 공공임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가 정착의 핵심이라는 것을  
수도권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고성군은 이 흐름에  
앞서 가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고성군에는 매년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정말 ‘사람을 모으는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고성군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분양된 국민주택 규모의 잔여 세대를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등  
지역에 남아 있는 국민주택 기준의  
미분양 아파트를 군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람을 모으고,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분명한 정책'입니다.

둘째, 방치 건물을  
정착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부여군처럼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 공동체 주거, 귀촌인 주택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셋째, 빈집·빈 점포를  
생활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을 매입·철거·리모델링해  
청년 농부 주택, 사회 초년생 주거, 기업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도권조차 만원 임대주택·천원 임대주택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에 직면한 우리 고성군이  
이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질적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 김석한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리 고성군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 과감한 주거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